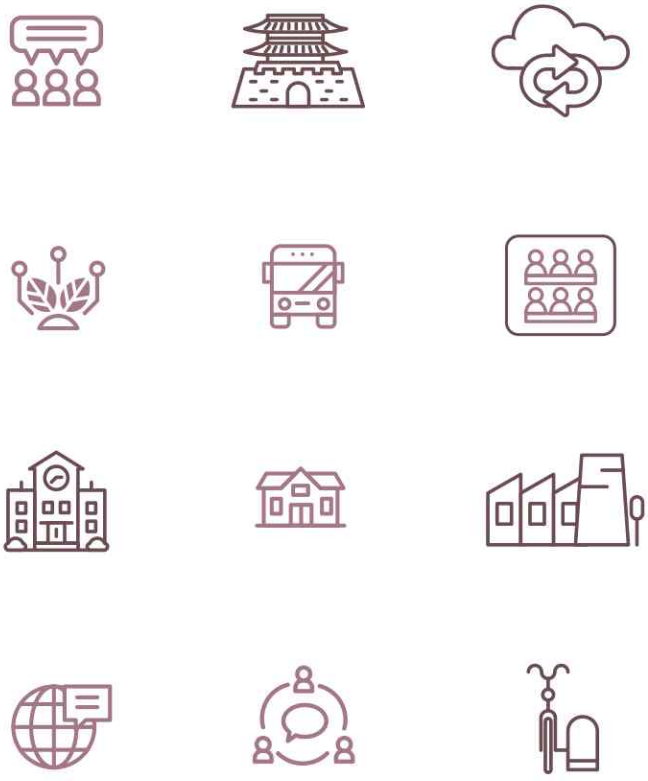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6-제5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정책동향

1.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관계부처합동) ····· 3

2. 국민성장펀드가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이차전지의 실질적 성과창출 지원 (관계부처합동) ···· 4

3. 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질없는 출범 위한 행정기구 정비(행정안전부) ····· 5

4.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 6

5. 고유가 피해 관광업계에 위기 극복 마중물 제공(문화체육관광부) ····· 7

6.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8

7.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교육부) ····· 9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AI 등 혁신분야 연구인력세제지원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12

2.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13

3.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15

4.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16

5.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자 (전북연구원) ·· 18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6-05호

목 차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추경에 따른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 필요 (교육위원회) ····· 22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사랑 상품권(행정안전위원회) ····· 23

3.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4

4.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5

5. 농지 전수조사 수행을 위한 대규모 조사원 신규 채용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6

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지역 선정시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필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7

7.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개선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8

8.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9

9.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상담인력 채용 관리 및 AI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등 (보건복지위원회) ····· 30

10.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1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6-05호

I

정부부처 정책동향

관계부처합동

1.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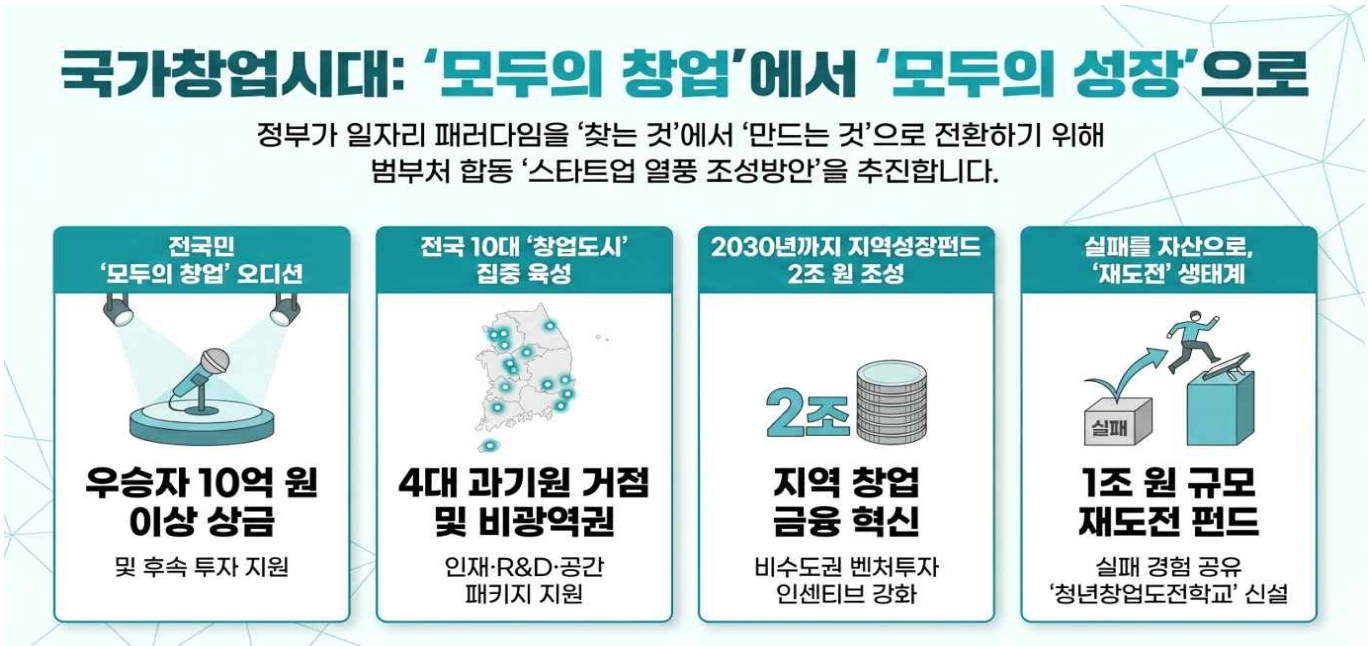
원문 바로가기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

○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쉬었음" 청년도 증가하고 있음

○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 씨앗**을 뿌리고 **테크·로컬 창업**으로 **확산, 혁신 창업 생태계 강화**하고, 추경을 통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연내 신속 추진,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 지원

○ 과기원 소재지를 **4대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26), 비광역권 중심 6곳 추가 지정**해 **'창업도시' 총 10곳 조성, 인재·R&D·투자·창업공간** 등 **패키지 지원**하고,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금융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 **규제혁신, 개방형 혁신, 재도전** 등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관계부처합동

2. 국민성장펀드가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이차전지의 실질적 성과창출 지원

원문 바로가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기업(업스테이지)을 포함한 총 5건의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대출건을 승인

- **'업스테이지'에 5,600억원대 직접 지분투자**(첨단기금 1,000억원)
  → "Solar Pro", "Solar Open" 등 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 **GPU 1.5만장 이상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에 지분투자** → 산업·연구계의 AI 연구개발 지원 및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확대 등 AI 3대강국 도약 뒷받침
- **새만금산업단지 내 음극재 핵심소재 생산공장**을 짓는 **'퓨처그라프'에 2,500억원**의 저리대출 → 해외 중심인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
-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생산공장 증축**을 추진하는 중견기업인 '에스티젠바이오'에 850억원 저리대출 → 세계 2위인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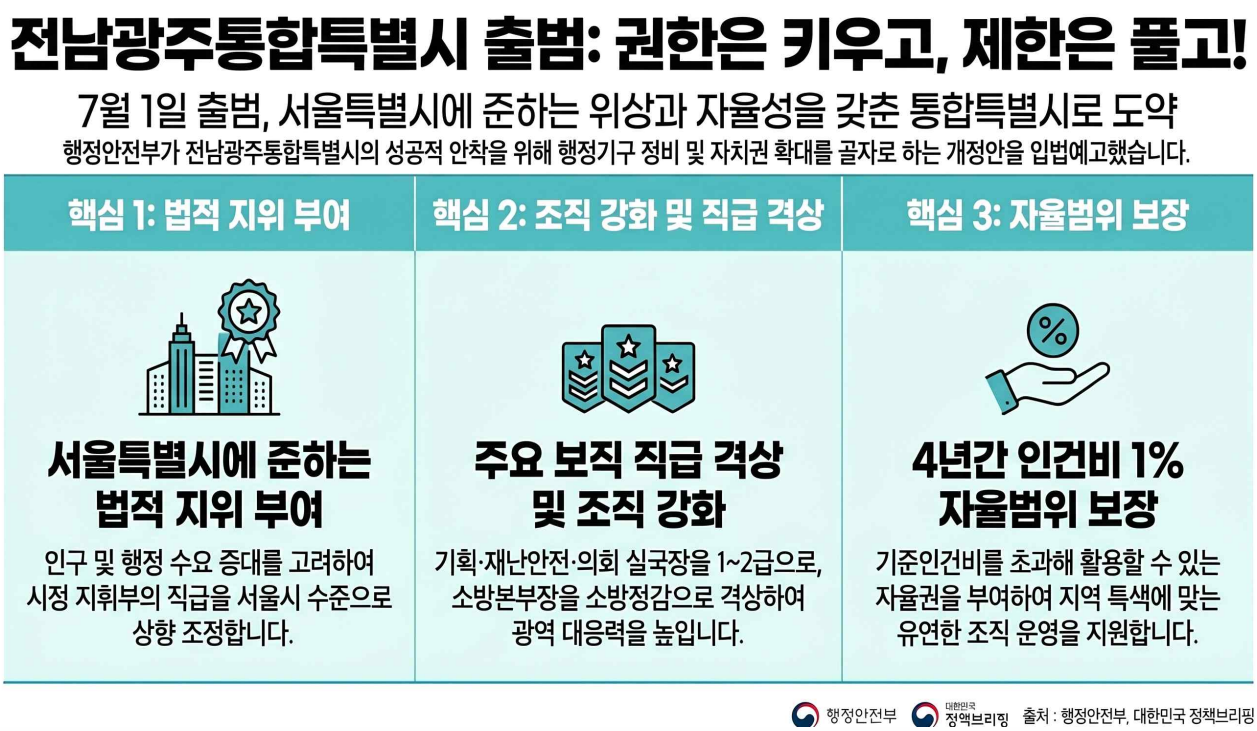
3. 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질없는 출범 위한 행정기구 정비

원문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기구 정비 및 자치조직권 확대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획 및 재난안전 담당 지휘부, 의회사무처장, 소방본부장 등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4년간 기준인건비의 1%를 자율범위로 보장**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리적 결합을 넘어선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통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



보건복지부

4.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원문 바로가기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청년·장애인 권익 보장을 위한 13개 법률안 국회 통과

○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15년 의무복무** 규정 마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 신설

○ **의료사고** 설명의무 부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 체계 구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하여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 청년 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및 유전물질을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범위 확대, 합성 니코틴 부담금 감면 및 **사망 신고 시 연금 자동 처리** 등 행정 편의를 위한 생활 밀착형 제도 정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보건복지부 13개 주요 법률 국회 통과’

구분	주요 내용 (Headline)	상세 정보 (Supporting Detail)
의료 인력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전원 설립	4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공공의료 15년 의무복무 규정.
의료 안전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장애인 복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	장애인의 존엄권과 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 마련.
청년 노후	청년 세대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도입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 기반 마련.

NotebookLM

문화체육 관광부

5. 고유가 피해 관광업계에 위기 극복 마중물 제공

원문 바로가기

고유가 피해 극복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지원 확대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으로 위축된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
-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3,375억 원)에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여 총 4,375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확대 시행하며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 관광 분야 혁신을 주도할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관광사업체를 위해 신축(최대 30억 원), 개보수(최대 10억 원), 운영(최대 3억 원) 자금 한도로 **총 3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체 스타트업 융자'를 별도로 시행**하여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
- 하반기 융자지원 사업 역시 당초 예정된 3,000억 원에 추경 예산 잔여분인 700억 원을 더하여, **총 3,70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

관광업계 위기 극복! 관광기금 융자 2,000억 원 확대

지원 내용	규모 및 주요 특징	세부 지원 대상 및 목적
	4,375억 원⊕ 상반기 융자 규모 확대	기존 계획보다 1,000억 원 추가 공급으로 경영 위기 극복 지원
	300억 원 관광 스타트업 별도 지원	창업 7년 미만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안정적 안착 도모
	3,700억 원 하반기 융자 시행	추경 잔여분 700억 원을 더해 중단 없는 금융 지원 지속
	02-757-7487 융자상시지원센터 문의	문체부 누리집 및 관광기금 융자 누리집에서 상세 지침 확인 가능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6.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원문 바로가기

AI 기반 방송미디어 제작·유통 혁신을 위해 5년간 727억 원을 투입하여 멀티모달 제작 기술 및 개인 맞춤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현

○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심화와 OTT 이용 확산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제작 환경을 구축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 과제 본격 지원**

○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14개 R&D 사업을 통합 재기획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도로 올해 8개 신규 과제에 79억 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방송미디어 분야 대표 사업으로 육성**

○ 대화형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음성 지시로 영상이 자동 구성·편집되는 환경을 구현하고, 다수 제작자가 동시 참여하는 **실시간 협업형 제작 플랫폼을 구축**하여 콘텐츠 제작 전주기의 효율성 극대화

○ 시청 이력과 페르소나를 반영한 AI 모델을 통해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장면을 자동 생성하는 맞춤형 기술 확보 및 이용자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형 AI 에이전트 개발을 통한 **정교한 개인화 미디어 서비스 제공**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5년간 727억 원 투입

핵심 분야 및 기술	주요 목표	지원 규모 및 상세 내용
지능화 제작 / 마이미디어 플랫폼 / AI 에이전트 3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AI 기반 미디어 제작 전주기 혁신** **초개인화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구현**	**2030년까지 총 727.67억 원 투입** 올해 8개 신규 과제에 79억 원 지원 시작, 5년간 대규모 투자
멀티모달 AI 활용	말 한마디로 영상 자동 구성·편집 환경 구축	이용자 시청 흐름/관심사 반영 콘텐츠 자동 생성·추천 AI 모델 개발

NotebookLM

교육부

7.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문 바로가기

지방 거점국립대학교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재디자인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연구역량·인재 유출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와 지방 소멸 위기로 연결되고 있음

○ '5극 3특' 중심의 초광역권 재편과 AX(AI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및 전 학문 분야의 AI 기반 교육체계 혁신이 필요**함

○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연계된 산학연 혁신체계를 기반으로 AI융합교육, 계약학과, 공유대학, 지역인재 정착 지원 등을 확대하여 전략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함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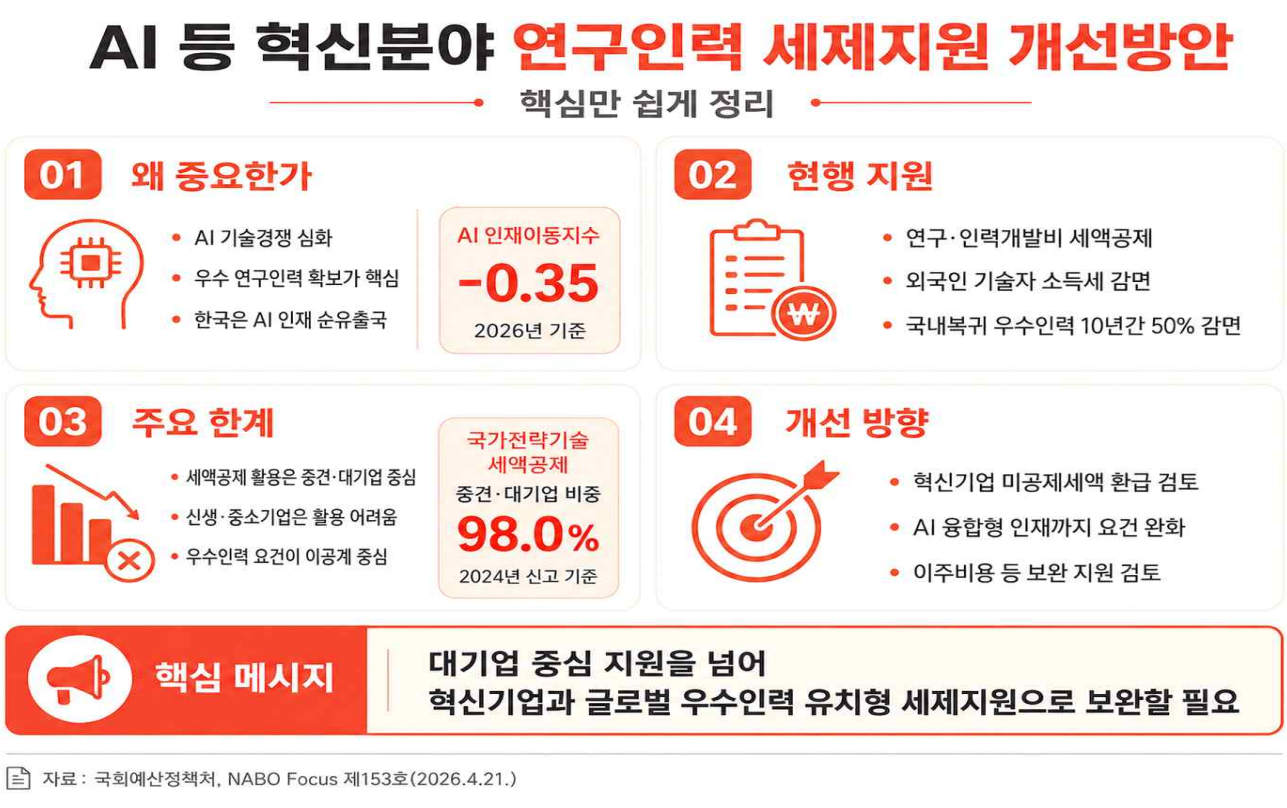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1. AI 등 혁신분야 연구인력세제지원 개선방안

원문 바로가기

우수 연구인력 유치·정착을 위한 세제지원 실효성 강화 필요

- AI 등 혁신분야 기술경쟁 심화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 중요성 확대
- 우리나라는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분류돼 인재 유치·정착 대책 필요
- 현행 세제지원은 연구인력 고용기업 세액공제와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중심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강화됐지만 실제 활용은 중견·대기업에 집중
- 신생·중소기업은 장기 결손 가능성이 커 세액공제 활용에 한계
- 혁신기업 미공제세액 환급, 우수인력 요건 완화, 이주비용 지원 등 보완 필요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53호(2026.4.21.)

한국개발연구원

2.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원문 바로가기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 개편과 돌봄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

○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2043년까지 현재의 2.4배 이상 폭증**할 전망.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34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되며, **2043년에는 서비스 유지를 위해 약 99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부족 사태 우려**

○ 현재 국내 노인돌봄 현장의 **외국인 인력 비중은 0.9%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낮으며, 종사자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심화. 이는 기존의 국내 인력 유인책이나 **단순한 처우 개선 노력**만으로는 **폭발적인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인 한계 직면**

○ 따라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 정책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 요구**

○ 단순 저숙련 인력 도입을 넘어 노인돌봄 특화 비자 체계를 신설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생들을 전문 돌봄 인력으로 양성**하여 정착을 유도하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인력 부족 지방 및 소외 지역 장기 근속 외국인에게 가산점 부여나 **영주권 연계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또한 개별 허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적인 인력 수요와 공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총량 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인력 운용 전략 수립 시급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기술적 측면**에서는 돌봄 로봇 등 첨단 보조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여 돌봄 노동의 생산성 제고. **로봇 기술 활용**은 요양보호사의 육체적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부상을 방지하고 고용 지속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수급자에게 더욱 정교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

○ 다만 돌봄 로봇이 대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기술 도입과 병행하여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수**

○ 돌봄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의 실질적 개선,** 숙련도에 따른 차등 보상 체계 강화 등 **근본적인 처우 개선** 선행 요망

○ 마지막으로 일차적 인력 확충을 넘어 국내외 우수 인력이 자발적으로 유입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건강한 돌봄 생태계 구축 필수. 이를 위해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처우 개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고령자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적 돌봄 시스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 마련 시급**



한국개발연구원

3.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원문 바로가기

정부는 스케일업 지원사업 체계를 정비·통합관리하고, 실질적인 기업 성장 및 역량 제고와 연계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 현재 업력 8~19년 기업의 고성장 비중이 **2009~11년 14.4% → 2020~22년 7.8%로 급락**하고, 창업 이후 스케일업 단계에서 성장이 막히고 있음

○ **제조업은 R&D·AI·수출이 고성장, 서비스업은 브랜드·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핵심 요인으로 현행 **R&D 지원 위주의 단일 정책은 효과 제한적**

○ 따라서 원스톱 진단 기반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직접 사업을 찾아 신청하는 방식 대신, 한 번 신청으로 **성장 병목을 진단받고 최적 정책 조합을 연계해주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나아가 **스케일업 사업 통합관리 및 성과지표 개편**하여 현재 8,131건·약 9,811억원 규모의 사업 중 **분절 운영 중인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성과지표를 지원 건수 중심에서 **매출·생산성·고용 성장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기업 스케일업(Scale-up) 성공의 열쇠: '성장 병목' 진단과 맞춤형 정책 패키지



전북연구원

4.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

원문 바로가기

전북 청소년의 신체활동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학교스포츠클럽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JB형 학교체육-지역스포츠 연계 운영모델' 구축을 제안

○ 최근 10대 청소년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2024년 45.9%), 청소년 체육활동의 73%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전북 지역의 학교스포츠클럽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극심한 침체기(2021년 등록률 2.7%)를 거쳤으나, 2023년 기준 71.4%의 등록률을 기록하며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지도 인력 부족, 프로그램 다양성 제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

2.7%에서 71.4%로, 기적적인 회복력		2021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참여율이 2023년 '학교체육 정상화'와 함께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14만 명의 학생이 함께 뛰는 전북		2023년 기준 총 143,085명의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뚜렷한 참여 격차		전주·군산 등 시 지역 참여는 활발하나, 임실·장수 등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참여 인원이 적습니다.
남녀 학생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남학생 53.2%, 여학생 46.8%로 성별에 관계없이 고른 참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4대 핵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눈에 보는 4대 학교체육 공모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맞춤형 체력향상	전 학생 대상 건강증진 (123개교)	체육 기피 학생 흥미 유발
교내리그전	참여형 시즌제 운영 (237개교)	자발적 신체활동 활성화
아침운동(아신나)	등교 전 인성 중심 체육 (205개교)	학교폭력 예방 및 만족도 제고
365+ 체육온활동	틈새 시간 주도적 활동 (68개교)	자기주도적 운동 습관 형성

○ 본 연구는 현재의 분산된 학교체육 정책을 학교스포츠클럽 중심의 통합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도교육청-체육회-종목단체가 협업하는 '**JB형 학교체육-지역스포츠 연계 운영모델**' 구축을 제안함

○ 이를 위해 5개년에 걸친 단계별 로드맵(**법·제도 정비** → **전담기관 설립** → **플랫폼 구축** → **지역 연계 확대** → **거버넌스 확장**)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전북 학교스포츠클럽의 혁신: 'JB형 연계 모델'로의 전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 스포츠 생태계 구축 로드맵

구분	주요 내용 (핵심 요약)	상세 내용	지원 세부사항 / 로드맵
현행 문제점	인력·인프라·연계성 부족	4대 한계점 ⚠ 지도 인력 전문성 부족 ⚠ 학교 시설 의존	⚠ 학교급 간 단절 ⚠ 정책의 분절성
정책 방향	지역 스포츠 생태계 통합 플랫폼 구축	주체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북도 (행정 지원) 교육청 (정책 실행)	체육회 (연계 실행) 종목단체 (강사 파견)
핵심 모델	JB형 학교체육-지역스포츠 연계 모델	JB형 연계 모델 도입 전북 학교체육·지역스포츠 협력센터	시설 공유 표준 운영 체계 마련
추진 단계	5개년 단계별 로드맵 이행	5단계 활성화 로드맵 1년 : 법·제도 정비 2년 : 전담센터 설립 3년 : 플랫폼 구축 4년 : 지역 연계 확대 5년 : 거버넌스 안착	

전북연구원

5.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자

원문 바로가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속가능한 미래형 산업집적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난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 전환의 필요성과 5대 과제를 제시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2~2024년 **3년간 입주 면적**이 이전 **8년 대비 1.8배 급증**하며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성장은 부지·전력·도로 등 **물리적 하드웨어 공급에 의존**한 것으로, 전국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지속 우위를 확보하려면 **금융·세제·산학연 네트워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역량**으로의 **전환**이 시급

○ 판교테크노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등 선도 사례들은 이미 법적 근거를 갖춘 전담 지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소프트웨어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새만금특별법에는 입주기업 종합 지원에 관한 조항이 미비**한 상태

○ **Legal(법적 기반)** :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여 입주기업 소프트웨어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단지 조성 중심의 현행 법 체계를 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출발점

○ **Ecosystem(산학연 생태계)** : 동종·이종 업종 간 유기적 교류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가 자생하는 융합형 생태계를 조성

○ **Advancement(공간 고도화)** : 전력·용수 공급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전체를 AI 전환(AX)·탄소중립·RE100 실증이 가능한 살아있는 거대 실험실로 고도화

○ **Partner(전담체계)** : 이차전지 특화단지, 에너지융복합단지, 강소특구 등 각기 다른 주관기관이 파편화되어 있는 현재 구조를 통합할 전담 컨트롤타워를 확보

○ **SW Support(기업지원)** :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의 기업성장 5종 패키지를 새만금 맞춤형으로 운영

○ 5가지 과제를 종합하여, **새만금 국가산단이 지속가능한 미래형 집적단지로 도약(LEAP)**하기 위해 **법적기반(Legal), 산학연 융합 생태계(Ecosystem), 공간 고도화(HW Advancement), 전담체계(Partner), 기업지원(SW Support)** 등 5대 과제를 하나로 묶어 **'LEAPS for 새만금' 프로젝트** 제시

○ 새만금은 **'땅을 주는 곳'**에서 **'기업이 혁신을 완성하는 살아있는 실험실'**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추경에 따른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 필요 (교육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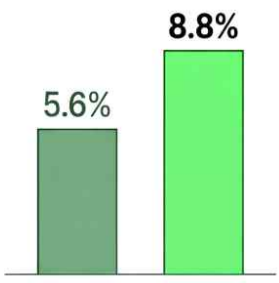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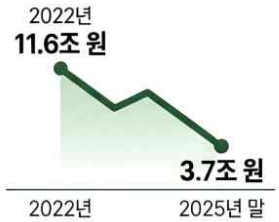
추경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함께 디지털 교육 성과 분석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4조 7,693억 원(6.7%) 증액된 76조 4,380억 원으로 편성됨. 이는 내국세 세입 증액 경정에 따른 법정 연동 결과로, 시도교육청이 당초 예상했던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임

○ 최근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교육청의 여유 재원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재정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집행 기간의 부족과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적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집행 계획 수립이 시급함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효율적 집행과 개편의 필요성

2026년 4.8조 원 증액 편성, 체계적인 재정 운용 및 구조 개편 논의 시급

대규모 증액 편성	최근 10년 평균 상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급감	재원 체계 개편 논의
4조 7,693억 원 증액 2026년 본예산 대비 6.7%, 전년 추경 대비 8.8% 증가. 총 76.4조 원 규모.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한 급격한 감소	 디지털 교육 학생 수 감소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연장 여부 논의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개편 필요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사랑 상품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핵심 내용 및 검토 사항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4조 8,251억 8,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소득계층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국고보조율 적용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보조율의 다층화 및 국고 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함
- 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논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복수의 정책사업마다 사용기한 및 사용처 제한 등 요건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급자의 이용 편의를 저하시키므로,
- 취약계층 중심의 사용 조건 단순화·표준화 및 인구감소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용처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1차 우선 지급한 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이나,
- 선별 절차로 인한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1·2차 지급 간 시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생지원을 추진해야 함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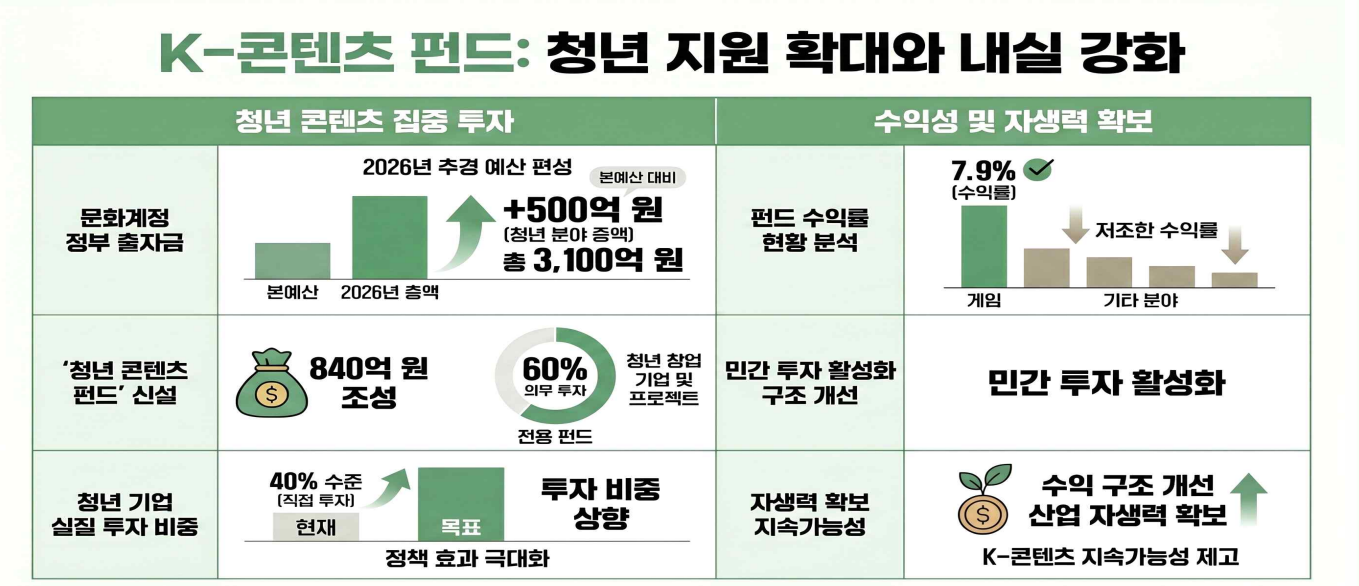
3.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추경 편성 현황 및 개선 과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 40%에 그칠 수 있어 정책 취지 구현을 위한 지원 비율 상향 검토가 필요함
- 투자 대상 중 하나인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개념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 대상을 면밀히 설계해야 함
-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게임 분야(실제수익률 7.9%)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러한 수익률 저조가 지속될 경우 민간 참여 유인이 약화되어 정부 재정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펀드의 안정적 운용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정책 목표가 제약되지 않도록 수익성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함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4.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모니터링과 유통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체 할인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을 1,580억원으로 증액 편성함,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의 행사 직전 가격 인상 사례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며 사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도매가격 등 외부 기준을 활용한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아울러 자체 할인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언함

2026년 제1회 추경안 분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용 과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500억 원 증액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자발적 할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예산 증액 현황

500억 원 증액, 총 1,580억 원 규모
(본예산 대비 46.3% 확대 편성)

구분	주요 내용
예산 현황	본예산 1,080억 원 → 추경안 1,580억 원 (500억 원
지원 방식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20~30% 할인쿠폰 및 환급 지원
추경 목적	환율·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 완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센티브 및 평가체계 보완

분석 항목	개선 필요성 및 정책 제언
모니터링	판매가 외 도매가 비교 등 다각적 검증 및 부당행위 시 참여 제한 조치
인센티브	자체 할인을 우수 업체에 차년도 우선권 부여 등 연계 강화
평가체계	단순 목표 달성률 위주에서 벗어나 객관적 이행 실적 평가로 보완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5. 농지 전수조사 수행을 위한 대규모 조사원 신규 채용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농지 전수조사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법적 근거 미비 및 향후 계획 등 신규 편성 예산에 대한 소명이 부족

○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농지 특별조사원 채용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근거로 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당초 계획액 대비 587억 7,100만 원 증액된 총 727억 1,500만 원이 편성**

○ 조사원 채용 규모가 **5배 이상 급증(850명→4,500명)**했으나, 지자체별 상이한 공고 일정을 관리할 지침이나 통합 채용 플랫폼 활용 방안 부족

○ 현행법상 출입조사권이 공무원·위탁기관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인 기간제 조사원의 현장 조사 시 **소유자 거부 등 법적 논란** 및 실효성 저하 우려

○ **드론 구매를 위해 약 6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운용 인력 교육·보험 가입·중장기 활용 계획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 규정 정비 미흡

○ 신규 편성된 **출장여비·피복비(약 45억 원)의 산출 내역이 불투명**하며, 농관원 조사 예산(약 64억 원) 추가 편성에 대한 필요성 소명 불충분

농지 전수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4대 핵심 개선 과제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과제
조사원 채용 관리	**대규모 조사원 채용 관리 체계 미흡** 조사 인력이 850명에서 4,500명으로 5배 급증, 효율적 관리 어려움	통합 채용 플랫폼 활용 및 표준 조사 매뉴얼 제작
현장 조사 법적 근거	**타인 토지 출입 권한 불분명** 기간제 근로자 조사원의 조사 거부 및 법적 분쟁 우려	민간 조사원의 현장 조사 법적 근거 확보
드론 활용 계획	**중장기 계획 및 내부 규정 부재** 한국농어촌공사 드론 110대 구매 예산만 편성, 운용 교육·보험·프라이버시 보호 규정 미비	운용 교육, 보험 가입 및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 마련
예산 산출 근거	**신규 편성 예산 근거 불명확** 출장여비·피복비(44억 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비(63억 원) 구체적 필요성 부족	신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 소명

NotebookLM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지역 선정시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필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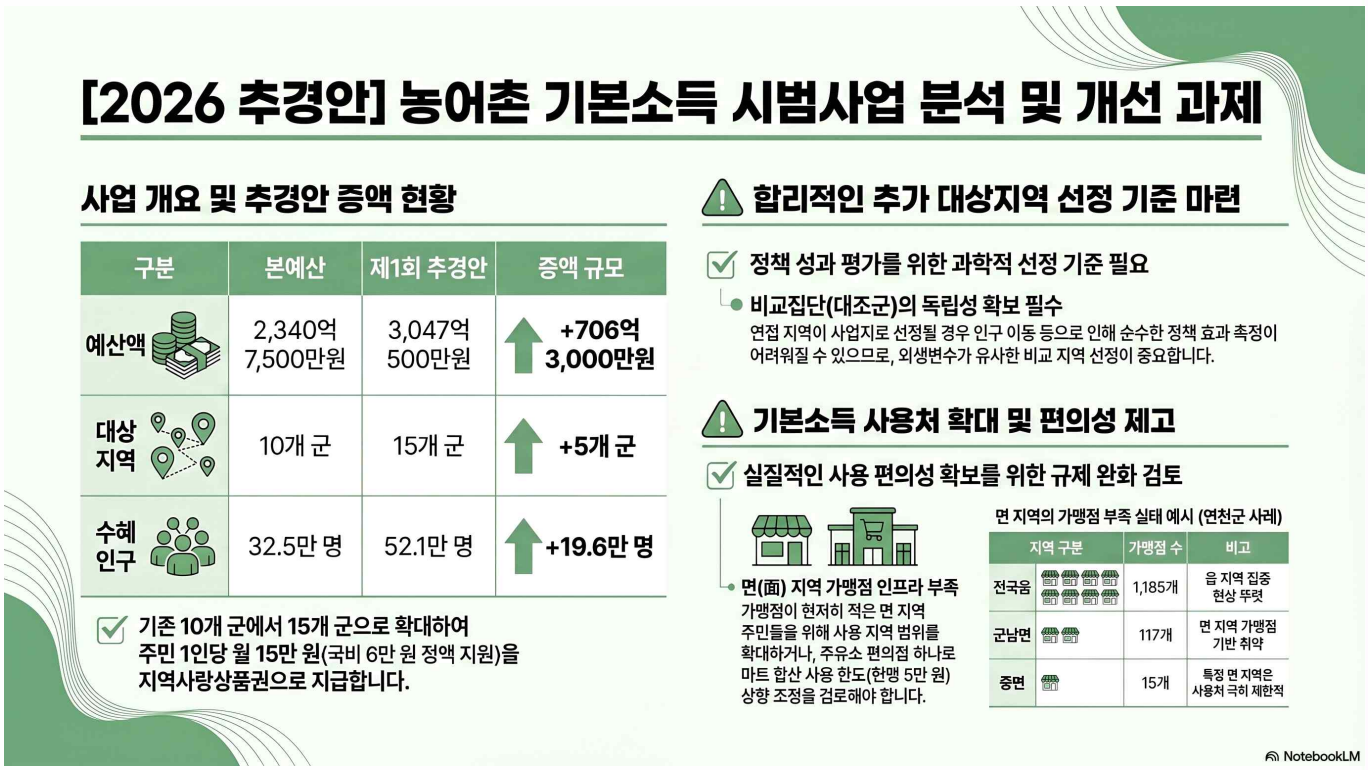
원문 바로가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면 지역 주민의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부는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3,047억원으로 증액하고, 인구소멸지역 5개 군을 추가 선정할 계획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시범사업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비교 연구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상지역 선정 기준 마련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 또한 면 지역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부족해 사용처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사용 범위 확대와 주유소·편의점 등 사용 한도 상향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언함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7.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개선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정부는 나프타·요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와 가격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선과 요소 국내 생산 기반 마련 등 중장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공급망안정화 종합지원 사업 예산을 6,084억원으로 확대하고,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과 요소 수입단가 보조를 추진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나프타 중심 NCC 설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 충격에 취약하다며, 원료 포트폴리오 및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요소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수입선 다변화 정책만으로는 글로벌 공급 축소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국내 생산 기반 재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2026 추경: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나프타 & 요소'

핵심 원자재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및 공급망 구조 개선
4,734억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예산

구분	예산	중장기 개선 방향
나프타 (Naphtha)	₩ 4,695억 원(신규)	NCC 집중 구조 개선 및 다변화 유도 • 원료 포트폴리오 다양화
요소 (Urea)	₩ 39억 원(증액)	국내 생산 기반 재구축 검토 • 수입선 다변화 한계 극복

NotebookLM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8.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모두의 창업 1차·2차 통합 추진 필요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트랙 2차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창업저변 확대'의 신규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 편성**, 로컬트랙 2차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본예산 대비 453억 2,000만원이 증액된 678억 7,000만원 편성

○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의도와 달리 2026년 본예산을 당초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한 부적절성**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거나 2026년도 추경 예산을 **1차 예산에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 필요**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9.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상담인력 채용 관리 및 AI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등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인력 채용의 낮은 실효성, AI 도입의 시급성 부족, 사업명과 편성 취지 간의 부정합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민원 대응 및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예산 대비 **49억 7,200만 원 증액된 총 53억 7,500만 원이 편성**

○ 단기 상담인력 294명 채용을 계획했으나, 전년도 유사 사업에서 목표 미달 및 63%의 낮은 실집행률로 인해 7억 3,800만 원이 불용된 전례가 있어 실효성 있는 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

○ 상담전용 **AI 모델 및 장비 도입을 위해 약 29억 2,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25년 추경으로 **이미 서버 증설 등 전산 인프라 보강이 완료**되어 추경 요건인 시급성과 예측불가능성 저조

○ 지원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 확인 민원 폭증이 예상**되나, 상담 인력의 안정적 배치와 운영을 뒷받침할 지역별 활용 계획 및 구체적인 교육 대책 등의 사전 준비가 미흡

○ 추경 목적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임에도 내역사업명이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으로 되어 있어, **예산 편성 취지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명칭 수정**이 요구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안: 3가지 핵심 문제점 진단

문제점 구분	핵심 문제	세부 내용 및 근거
집행 부실 ✕	반복되는 상담인력 채용 실패 및 예산 불용	**예산 19억 중 7억 (37%) 불용** 2025년 상담인력 채용률 저조
시급성 결여	AI 인프라 예산의 시급성 부족	⚠ **29억 원 편성 불필요** 이미 2025년 전산 인프라 구축 완료
명칭 불일치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명	실제 목적: 고유가 피해지원 / 사용 명칭: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모호한 명칭, 즉각 수정 필요**

NotebookLM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10.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바로가기

과거의 반복적인 예산 불용 실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예측 및 지방비 추가 확보 부담을 고려할 때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900억 원이 증액 편성**

❍ 부처 측은 2026년 2월 말 기준 전기화물차 보급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7% 급증한 시장 수요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은 집행 저조로 매년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으며 2025년에도 **수요 부진으로 대규모 감액 추경**을 거침

❍ 또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확인된 지방자치단체의 전기화물차 **수요 확보 물량은 29,620대지만 이번 추경안은 37,670대를 대상**으로 계획. 더욱이 추경 물량을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국비의 30% 이상을 분담해야 함에 따라 최소 **241억 5,000만 원의 지방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초기 데이터에 기반한 물량 확대보다는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

